

경제 규제혁신 TF
23-7-1
(공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2023. 6. 7.

관계부처합동

순서

I. 추진 경과 및 주요특징	1
II.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2
III. 향후계획	7

I. 추진 경과 및 주요 특징

1. 추진 경과

-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 구성*·운영(6.23~)하여 규제혁신 추진
 - * 경제부총리, 민간 전문가 공동팀장 /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민간위원(12명)
- 그간 6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74개 규제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이차전지, 친환경에너지(연료전지, LNG 등), 화학, 자동차 등 분야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 8.3조원 민간투자 창출 (☞ 참고 3)
 - 순환경제, 중소·벤처, 외환, 국가계약 등 규제혁신 요구가 크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7개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참고 4)
 - * 순환경제, 중소·벤처, 철도, 외환, 조달, 건설, 국가계약

2. 주요 특징

1]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 민간투자 3천억원 지원

-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 대기배출 관련 기준의 합리적 변경 등으로 기업의 공장증설 지원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확대가 시급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가속화 지원

* 글로벌 RE100 확대 : '23.5월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총 32개 국내 기업 가입 ('20년 6개 → '21년 14개 → '22년 27개 → '23.5월 32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정안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21.6→ 21.6+α%) 및 발전부문에서 태양광·풍력·수소 등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400만톤 추가 감축 등

2] 수·출입 기업 부담 완화 ⇒ 수출 활성화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 합리적 개선 → 기업 시간·비용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II.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 ◇ ①공업용수 공급, 산단 입주요건 합리화 등 공장증설 지원, 해상풍력 발전사업 불확실성 완화 등 투자프로젝트 등 애로 해소, ②수출입 기업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1 기업의 현장 애로·규제 해소

①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 투자금액 1,500억원]

- (현행)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이 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하여 공장증설에 어려움
 - * (공급) 상수도, 유희 지하수 등 활용하여 일일 최대 1,500톤 대체공급
(수요) 현재 일일 700~1,400톤 사용 → 신규사업 운영시 300톤 추가 소요 발생
- (개선)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 * (단기)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既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 추진
(장기) 현재 조성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하여 공업용수 연계공급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 협의 완료

②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 투자금액 470억원]

- (현행)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 → 공장 가동** 및 신규공장 증축 차질

* 同산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아크로니트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배출 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에 상관없이 입주 제한

- ** 당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생산공정을 채택하여 공장을 건축하였으나 채산성이 낮아 공장 미가동 → 해당물질을 일부 배출하는 공정으로 변경 불가피

- (개선)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일정 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구역에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배출농도가 일정 농도 미만인 업체의 입주 허용

-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접수(낙동강유역환경청, '23.5.15)하였으며, 동 협의결과를 검토한 후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23. 3분기) 계획

[조치사항] '23.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③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 완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 투자금액 1,000억원]

- (현행)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 →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애로 존재

* 강사 학력요건(학교교과교습학원 기준): (외국인) 대졸 이상, (내국인) 전문대졸 이상

- (개선)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4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 투자금액 15억원]

- (현행) ①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보온재 공장 앞 부지까지 도로 구역으로 지정되어 창고 증설 등 개발행위 제한
 - ②경매로 공장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진입로 사용 권한이 인정되는지 증빙이 곤란하여 신축공장 건축허가 지체
 - * 해당 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등기주소가 前소유자 등기주소와 상이하여 권한 승계 인정 곤란 →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진입로 공동사용승인 절차 지연
- (개선) ①창고 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도로구역 변경·해지, 재산관리관 변경* 후 매각
 - * 1)도로구역 폐지(대구국토관리사무소) → 2)공장인근 부지 필지분할 및 재산관리관 변경(김천시)
 - ②과거 토지 기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진입로 공동사용 승인

[조치사항] ① '23.3분기까지 국도 미인접 부지의 도로구역 해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완료
 ② '23.5월초 진입로에 대한 공동사용승인 완료(既조치)

5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

- (현황) 해상풍력 발전기는 대형화 추세이나, 레이더 차폐구역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에는 미반영되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
- (개선)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작전성 검토기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작전 제한사항(차폐 구역 등) 해소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연구용역(~'23.12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24.2분기까지 해소방안 마련

2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

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 도입

- (현행)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상이
→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 발생

·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하여 유효기간 연장
- [운영]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능력에 따라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구분하여* 제도 운영
* (업체별) 모든 품목·협정 활용 가능 / (품목별) 특정 품목·협정 한정
※ '23.4월말 기준 총 14,874개社 중 업체별 10%, 품목별 90%

- (개선)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

* 유효기간이 상이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건 9,145건 × 유효기간 연장 신청 비용 건당 50만 원 = **약 45.7억원 비용 절감 효과**

[(예시)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 만료일 통합]

품 목	유효기간 만료일	인증유효기간 연장 후 만료일	
		[현재] 개별연장	[개선] 통합연장
보습제	2023-04-11	2028-04-10	2028-04-10 (가장 빠른 만료일로 통합)
유화제	2025-03-03	2030-03-02	
향 료	2025-10-26	2030-10-25	

* (現) '28.4월, '30.3월, '30.10월 각각 50만원 인증비용 발생(총 150만원)
(改) '28.4월 일괄 갱신으로 인증비용 총 50만원 → **100만원 비용 절감**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②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 확대

- (현행)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하여 운영인의 갱신절차 부담 과중
 - * 자신이 소유한 시설에서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특허기간 최대 10년
- (개선) 일정 조건하*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
 - *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치사항] '23.3분기까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③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 간소화

- (현행)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반입신고 필요**
 - * 법규준수도, 보세사 채용, 업무처리시스템 기준 충족 등 특정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공장으로서, 보세운송절차 생략 등 특례 적용
 - ** 보세공장에서의 물품반출신고는 생략 가능
- (개선)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 모두 생략

※ [사례] 반도체를 생산하는 보세공장 S社

- (현행) S社는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통합 재고관리를 위해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일괄 반출
 - 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출 시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건별로 이행 → 야간 및 공휴일 등에 화물을 신속하게 반출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물품의 반출입절차 생략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24시간 언제든지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입
 - ⇒ (효과) 연간 2만여 건 반출입신고에 대한 신고 수수료 약 1억원 절감 및 물류 리드타임 단축에 따라 인건비 연간 약 1천만원 절감(S社 추산)

[조치사항] '23.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4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 간소화

- (현행)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既 완료한 외국물품*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하여 사용할 시 재차 신고 필요

* ①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받기 전의 물품
②수출 목적의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개선) 사용·소비신고 완료 후 보세공장 등*으로 반출한 외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신고절차 생략

* ①보세공장, ②보세창고 중 외국물품 사용·소비가 허용되는 복합물류창고

[조치사항] '23.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Ⅲ. 향후 계획

-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 지속
 -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관광, 투자유치 등)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방 경제활력 제고 추진
 -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 지속적 과제 발굴 +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

참고 1

과제별 추진 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1-1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 협의)	'24.1분기	세종시
1-2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울산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23.3분기	울산시
1-3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 완화 (규제심판부 권고내용 검토하여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교육부
1-4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① 국도 미인접 부지의 도로구역 해지 및 재산관리권 변경 완료 ② 진입로에 대한 공동사용승인 완료)	'23.3분기	국토부 김천시
1-5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 (연구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 마련)	'24.2분기	국방부
2-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격 통합갱신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23.4분기	관세청
2-2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 확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3.3분기	관세청
2-3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23.3분기	관세청
2-4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23.3분기	관세청

참고 2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1-1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세종특별시 산업입지과	김남식 과장 044-300-4610	오석년 사무관 044-300-4632
1-2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울산광역시 미래개발부	정갑균 부장 052-229-8640	서흥덕 팀장 052-229-8651
1-3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 완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권삼수 과장 044-203-6383	권주미 사무관 044-203-6386
1-4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국토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채희연 과장 053-605-6030	김국현 주무관 053-605-6045
		김천시 건설도시과	배정현 과장 054-420-6330	김지찬 주무관 054-420-6886
		김천시 투자유치과	하광현 과장 054-420-6230	강아름 주무관 054-420-6635
1-5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	국방부 시설기획과	김순자 과장 02-748-5810	이정우 중령 02-748-5815
2-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격 통합갱신제도 도입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 042-481-3230	조점술 사무관 042-481-3206
2-2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보세 공장에 대한 특허기간 확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우철 과장 042-481-7750	박종호 사무관 042-481-7821
2-3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 간소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우철 과장 042-481-7750	박종호 사무관 042-481-7821
2-4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 무역지역 재반입 절차 간소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우철 과장 042-481-7750	박종호 사무관 042-481-7821

참고 3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총 22건, 8.3조원)

구분	내 용	투자 효과
1차 TF ('22.7.28)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	0.3조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	0.3조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분야 선정기준 설정 및 적용대상 제품군 확정 등 활용기반 마련	1.0조원
2차 TF ('22.9.5)	당초 지자체 계획에 미반영된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량 확보 지원	0.4조원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여 주유소에서 전기 생산 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0.4조원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1.0조원
3차 TF ('22.10.17)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1.2조원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0.2조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시 재정사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	0.1조원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 마련시 기존 공장 증설시에 준하여 신규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	0.03조원

구분	내 용	투자 효과
5차 TF ¹⁾ (23.3.2)	기업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이차전지 공장을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	2.8조원
	이차전지 R&D 센터 증설을 위해 기초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부지 용도변경 추진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 증설을 위해 투자 효과,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同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 및 충전이 가능하도록 기계식 주차장 허용 차량 무게 등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LNG 생산기지 건설(당진)을 위해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대한 기업측-당진시간 이견 조율	
	LNG 저장탱크 설치(광양)를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적기에 수시 변경하고, 사업계획도 신속히 승인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 마련	
	임대면적 초과가 가능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요건에 스마트 물류, 글로벌물류센터(GDC) 등 자동화·대형화를 통해 수출·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승인요건 구체화	
6차 TF (23.4.1 9)	글로벌 제약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탐색하여 제시	0.6조원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등 신속한 임대절차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 심의	
총 투자지원 효과		8.3조원

1)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상정(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참고 4

7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1 순환경제 활성화방안(‘22.9.5일 발표)

- ① (플라스틱 열분해유) 현재 기술 수준·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해, 화학적 재활용 중 열분해 방식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방안 마련
 -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의 활용 근거 마련,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 간소화 등
- ②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제도정비 및 지원 확대·기반확충 추진
 -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각종 폐기물 규제 면제,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 마련 및 검사부담 완화 등

☞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1조원+α 규모 기업투자 촉진 기대*

* (25년까지 투자예상규모, 추정) 플라스틱 열분해 65.~7.5천억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2.3천억원

2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22.10.17일 발표)

- ① (인증·검사·보고) 평가비용·시간 부담 경감, 평가기준 합리화, 인증정보 통합 제공 등을 통해 '숨은 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 해소
- ② (안전·기술 기준) 기술 발전을 미반영한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규제'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전면 해소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3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22.10.17일 발표)

- ①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 경감
- ②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4 외환제도 개편 방향(23.2.10일 발표)

- ① (1단계)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가능한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 우선 추진 → 규제개선 효과 조기 확산

* ▲자본거래 등 사전신고 규제 완화, ▲해외직접투자 사후 규제 완화, ▲대형 증권사 외환 업무범위 확대 등

- ② (2단계) 외환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편 필요과제는 관련기관·업계·민간전문가 참여하에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 논의

*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5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23.2.10일 발표)

- ① (혁신성장 지원)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 폐지 →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 등록기회 부여

* 종합쇼핑몰 등록시 수요기관-조달기업간 별도 계약체결 없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처럼 간편하게 주문 가능 → 제품 판로 개선에 크게 기여

- ② (현장활력 제고)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 개선* →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現) 계약단가 인상시 既 주문 물량은 인상 전 단가 적용
→ (改) 既 주문된 미납제품에도 인상된 단가를 적용

- ③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스마트 전자계약', '쇼핑몰 주문 로봇처리 프로세스' 도입 등 자동화를 통해 거래 절차 시간 대폭 감소

6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23.2.10일 발표)

- ① 모듈러*, 머신 컨트롤·머신 가이드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 기준과 원가 산정기준 신속히 마련 →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확산

* 동일 혹은 유사 패턴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先제작·운송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

** (Machine Control)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제어 (Machine Guidance)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

- ② 건설공사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국토부)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고용부) 간 중복사항 해소 → 시공사의 서류작성 부담 완화

- ③ 벌점경감 저축제도 도입 →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현재는 벌점이 있는 업체만 우수 안전관리에 따른 벌점경감 혜택이 가능

7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23.4.19일 발표)

- ①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 하한율 상향*

* (現) 60% → (改) 80%, 단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

- ②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정보 제공 시점을 앞당기고,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
- ③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턴키입찰 기본설계 보상비 조기지급, 종합심사제 공사 하도급계획 변경비율 확대 등
- ④ (업체 권익보호 강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